



기획 ▶5면

‘ICT 올림픽’ ITU 전권회의 대장정, 11월 7일 마무리

방송 기술 ▶6면

YES! AES! 137th AES Convention 참관기

오피니언 ▶7면

[칼럼] 공영방송 MBC, 정녕 민영화를 원하는가?

700MHz 주파수 정책 원점 재검토

재난망에 700MHz 주파수 중 일부 우선 분배

700MHz 주파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700MHz 주파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사업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700MHz 주파수 중 일부를 우선 분배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11월 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700MHz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미래부는 재난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 배정안을 내놓으

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분배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미래부가 제시한 계획으로는 지상파 UHD 방송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정책은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과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선 여야 의원을 포함해 정부부처, 관련 업계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재난망에 대한 주파수부터 확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재난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했던 만큼 미래부가 제시한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말한 뒤 “무로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분배도 빠른 시일 내에 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구 방통위에서 의결한 모바일 공개도 플랜을 전면 백지화하고, 700MHz 대역 주파수 중 718~728MHz(10MHz 폭), 773~783MHz(10MHz 폭)를 재난망에 우선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부, 표리부동의 결정판

700MHz 주파수 정책을 둘러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표리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700MHz 주파수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서 논란이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 일부를 통신사에 할당하겠다는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짤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0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문제는 이날 미래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수입 부분에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해 얻는 2,080억 원을 포함시킨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700MHz 주파수 정책을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는 미래부가 주파수 경매 대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집중 질타하고 나섰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 2015년 예산안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에 경매한다는 것을 전제

로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바로 뒤 “잘 몰라서 급하게 아닐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다시 보니) 통신용으로 40MHz 폭을 경매해 (얻는) 2,080억 원을 수입으로 잡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을 바꿨다.

최 장관의 말 바꾸기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미래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전 의원은 “국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는 (현재 주파수 분배표에서) 방송용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700MHz 대역 주파수 일부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에 분배하더라도 미래부는 보조적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미래부는) 방송용 주파수를 관리하도록 돼 있는 해당 기관과 최소한의 합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의 집 물건을 팔아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역시 “국회에서 뭐라고 하던지 여론에서 어떤 우려를 제기하

던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앞뒤 다른 미래부의 태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열린 미래부 국감 자리에서 ‘모바일 공개도 플랜’을 염두에 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최 장관은 “모바일 공개도 플랜은 수정 가능하며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모바일 공개도 플랜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최 장관은 “통신용으로 경매가 안 되더라도 여유 자금이 많기 때문에 지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뒤늦은 수습에 나섰지만 미래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 장관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마칠 때까지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통합방송법안 공개됐지만 ‘숲 없고 나무만’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방송법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지상파를 비롯한 전체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료방송에 국한된 입법기술적 차원에 머물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지난 10월 28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향(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해 온 공동연구단의 결과물로, 11월 말 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 입법 예정인 통합방송법의 초안 성격을 띤다.

이날 발표된 안은 일단 통합방송법을 통한 규제체계 정비의 기본원칙을 △이용자(시청자) 권익 증진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수립 △유료방송사업과 IPTV사업 간 규제형평성 실현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 4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해 그동안 TF를 구성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현재 제시된 법안이 이러한 기본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TF 일원인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발표안은 유료방송에 한정된 입법기술적 미세조정 원칙에 불과해 이용자 권익 증진, 즉 시청자 복지는 물론이고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항들을 어느 하나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서 “규정은 나왔지만 그것이 통합방송법 제정의 취지를 벗어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안에 나타난 핵심규정은 △실시간 방송·비실시간 방송 유형 명확화 △지상파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면허체계와 사업권역 현행 유지 △직접사용채널·SO·위성방송 공시채널로 규정, IPTV 금지 유지 △의무제공채널·규모 현행 유지(SO 19개, IPTV 1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채널별 양도·양수 허용 △중편·보도 콘텐츠, 현행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 적용 △

IPTV방송제공사업과 지상파방송사업 간 겸영제한의 범위를 위성방송이나 SO 수준으로 적용(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소유 겸영’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현재 세계 유례없이 IPTV(KT olleh tv)·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지분 51%) 2개의 플랫폼을 가진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합산 규제가 필요한데 정작 통합방송법안에 이 같은 규정은 배제됐다. 지난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합산규제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 없이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안은 또 ‘채널구성 및 운영’ 규정이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단 ‘직접

사용채널’을 IPTV는 현행대로 금지하고, SO와 위성방송은 공시채널로 규정해 기능을 축소하는 안은 다시 말하면 보도기능을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만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SO와 IPTV의 ‘의무전송채널’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또한 수신료를 거두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신료까지 챙기려는 종편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기 하는 것이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뿐 아니라 현행법상 구분이 모호한 ‘실시간방송’과 ‘비실시간방송’의 유형 명확화에 따른 후속문제도 만만찮다는 분석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실시간(linear)의 특징을,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DP)’에 비실시간(nonlinear)의 특징을 반영하고, 실시간에 대한 규제를 유지한 채 비실시간에 대한 규제만 완화하는 쪽으로 법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추 사무총장은 “실시간방송과 비실시간방송 구분에 따른 개선방

향은 이번 통합방송법안상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지만 이는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는 소량방송 등에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전체 방송시장뿐 아니라 방송광고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 영역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은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통합방송법안의 푸쟁이 열렸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방송관련 전문가들은 산업적 효과를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는 등 인적·물적 투자를 꾀했음에도 실질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 사무총장 역시 “전체 시장을 고려한 제대로 된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부와 방통위, 범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알립니다

〈KOBETA 콘퍼런스〉

미래 미디어 세상을 만나다

11월 19일 KBS 아트홀 ... 미래 미디어 생태계 변화 집중 논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오는 11월 19일 (수) KBS 아트홀에서 ‘기술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KOBETA 콘퍼런스(이하 KOC) 2014를 개최합니다. 최근 미디어 시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인터넷, 통신 등 플랫폼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KOC 2014에서는 인문·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시각으로 미래 미디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나아가 미래 미디어 시대의 선도자가 되기 위한 기술과 전략, 정책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지형에 맞는 뉴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콘퍼런스 프로그램

시간	세션	강사
09:30 ~ 10:00	사전 등록 명단 확인 및 현장 등록	
10:00 ~ 10:05	인사말	이후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10:05 ~ 10:10	축사	심학봉 국회의원(새누리당)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0:10 ~ 11:00	키노트 미래학자가 본 방송의 미래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 원장(전문미래학자)
KOC1. 기술, 세상과 소통하다		
11:00 ~ 11:40	모바일 인터넷 발전 통합과 전망 (방송 시장 중심으로)	최재홍 강릉원주대 교수(현 다음카카오 사외이사)
11:40 ~ 12:20	미디어로 진화하는 브랜드들	김명진 FRUM CEO
12:20 ~ 13:30 점심식사		
13:30 ~ 14:10	사물인터넷과 인터넷의 미래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KOC2. 미디어, 희망을 마주하다		
14:10 ~ 14:50	지속 가능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역할	정준희 중앙대 교수
14:50 ~ 15:30	방송의 특수성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시장, 경쟁, 시청자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경제학 박사)
15:30 ~ 15:50 Break Time		
15:50 ~ 16:10 아카데미 그룹 원더풀 공연		
KOC3. 사람, 미래를 만든다		
16:10 ~ 16:50	창의적 혁신, 그 이해와 이해 그리고 진화	김동준 이노캐탈리스트 대표
16:50 ~ 17:30	메모와 생각 정리 기술	이상혁 로이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17:30 ~ 17:40	경품 추첨 및 마무리	

- 일 시 2014년 11월 19일 (수) 9:30~17:30
- 장 소 KBS 아트홀(구 라디오공개홀)
-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주 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교육원
- 등 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www.kobeta.com)를 통한 온라인 등록
- 참가비 무료
- 문 의 전화 02-3219-5635~5641

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

2015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이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9개의 공익채널과 1개의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소상공인방송(yes TV) △한국직업방송(Work TV) △육아 방송, 과학 문화 진흥 분야에서는 △아리랑 TV △사이언스 TV △예술 TV,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EBS 플러스1 수능 전문 △EBS English △EBS 플러스2 중학/직업 등이 각각 선정됐다.

다만 이 가운데 육아방송에 대해서는 자체 제작 및 분방 편성 비율의 이행계획을 11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공익채널은 총 15개 채널이 선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각 분야별로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심사항목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했다”며 채널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장애인복지채널은 단독 신청한 복

지 TV(희망복지방송)가 선정됐으나 방통위는 고화질(HD) 방송을 위한 장비 구축 계획을 11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 위성사업자는 각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이날 선정된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공익채널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선정 신청 시 제출한 계획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공익채널 신청 시 제출한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공익채널 신청 시 자동 탈락하게 하는 등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익채널 선정 단위(1년)가 짧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미래부,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공개



©미래창조과학부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사용에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안전한 IoT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IoT 정보보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글로벌 IoT 보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1,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0월 30일 밝혔다. 미래부가 이날 공개한 로드맵은 10월 31일 열리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보고됐다.

IoT 정보보호 로드맵의 핵심은 △보안이 내재화된 기반 조성 △글로벌 융합 보안 시장을 선도하는 9대 보안 핵심기술 개발 △IoT 보안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미래부는 오는 2018년까지 각각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 제조, 건설, 에너지 등 7대 분야 IoT 제품·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유통·공급 및 유지 보수까지 전 주기에 걸쳐 보안 내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IoT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3대 보안원칙으로 △안전한 구조 설계 △핵심 요소의 안전한 개발 △공급망 안전 확보를 제시하고 7대 분야별 보안 고려사항도 개발·지원한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등 3계층별 IoT 특성을 고려한 9개 보안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시큐어돔

(Dome) 프로젝트’다. 시큐어Dome 프로젝트는 IoT 정보보호 로드맵 연구개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디바이스Dome’에서는 경량·저전력 암호 기술과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등이 개발되며 ‘네트워크Dome’에서는 IoT 침입 탐지 기술 및 보안 관제 기술이, ‘서비스Dome’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과 적응형 IoT 보안 솔루션이 개발된다(그림 참조).

이와 동시에 빠르게 진화하는 IoT 기술 및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IoT R&D 오디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미국 유럽 등 IoT 보안 선도 기술 보유 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핵심역량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IoT 보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IoT 융합 보안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IoT 보안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적극 창출하는 한편 ICT와 보안이 결합된 융합 보안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시큐리티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맞아 IoT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경제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큐리티가 담보돼야 한다”며 “앞으로 산업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IoT 제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mjkang@kobeta.com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700MHz 주파수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월 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래부는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국가의 경우 해당 여야 대역을 대부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대역까지도 이동통신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서를 만들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문서는 미래부가 최근 내놓은 ‘통합 공공망(이하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기초로 작성됐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년 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재난망과 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이동통신에 할당한 주파수를 우선 분배하고 잔여대역은 국제 주파수 분배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는 안을 문서에 담아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래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앞뒤가 다른 이중적 행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에서는 주파수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회에 보고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의원들을 설득하려 다니고 있는 것이냐”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발언과 미래부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감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미래부의 폐쇄적인 주파수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과 배정에 대한 부분은 (공개적인 공청회 등을 통해) 국회와 자세히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최 장관의 발언이 단순 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래부의 주장이 억지로 끼워 맞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프랑스의 경우 MPEG2+MPEG4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여야 채널을 만들어 UHD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통신 위성으로 주파수 부족을 해결해 UHD 도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주파수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프랑스처럼 다채널이 허용되어 있지도 않고, 일본처럼 방송사가 위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프랑스와 일본의 예를 들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의문을 표한 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래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프랑스는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통신용으로 할당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있

지만 ‘지상파방송의 현대화를 희생하면서까지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혀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할당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가 전달한 정보 중에는 잘못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UHD 방송으로 사용할 경우 일본 상향 주파수 전체(718~748MHz)에 간섭이 생겨 일본의 이동통신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주파수 전문가는 “일본과는 이미 협력 회의를 통해 양국이 접하고 있는 해안가의 주파수 혼신 해소 방안을 협의한 바 있고, 제주 및 남부 지역 일부 해안가 다출력 송신의 경우 송신안테나 패턴 조정과 일본 방향 차폐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간섭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실상 국내 모든 송신 시설에서 700MHz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며 미래부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파수를 할당하라는 여야 의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미래부는 국민이 아닌 이동통신사를 위해 존재하는 통신부처”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백선하 baek@kobeta.com

“KBS 수신료 현실화·EBS 배분률 상향해야”

10월 22일, 미방위 국정감사서 쟁점

10월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수신료 문제가 쟁점이 됐다.

먼저 KBS에 대한 국감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비롯해 공영방송의 공익성 강화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KBS가 수신료 현실화 노력을 중단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대현 사장이 ‘선 신뢰도 회복, 후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수신료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KBS는 야당 추천 이 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2013년 12월 10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34년째 동결 상태인 현행 2,500원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 해당 안을 가결해 국회 미방위 통과 절차가 남아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시 오보와 편파 보도 논란이 일면서 진행이 중단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대현 KBS 사장은 “KBS가 처한 환경에서 추동력이 필요해 내부적으로 먼저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면서 “국감이 끝나면 수신료 추진계획을 미방위에 설명하고 시청자를 설득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실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에서도 수신료를 인상해 KBS의 위상에 흔들림이 없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수신료 인상에 앞장설 수 있다”면

서 “KBS의 위상이 확보되면 운영 등의 문제는 국민 신뢰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BS가 검토 중인 수신료 반환 민원처리와 미납자 확인을 위한 유료방송 업계의 미환급금 조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KBS가 유료방송 가입 고객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24개 유료방송사업자가 별도의 고객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개인정보 오·남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KBS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명확한 사전 협의, 방통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BS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수신료 배분율 상향 문제, 무료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집중 거론됐다.

우선 현재의 불합리한 EBS 수신료 배분율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배분율 상향 등으로 공적재원을 마련해 재정구조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EBS의 공적재원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의 위상 확립을 위해 공적재원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

원이 “E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신료 배분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같은 당 최민희·전병헌 의원은 “현재 3%에 불과한 EBS의 수신료 배분율을 7%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EBS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EBS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연간 9,000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EBS를 국민이 무료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EBS가 수능 대비뿐 아니라 초·중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관심을 갖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10월 14일 열렸던 방통위 국감에서는 무료 보편적 지상파인 EBS 채널에 주파수를 쪼개 방송 채널을 여러 개로 늘릴 수 있는 MMS를 우선 허용하는 안이 거론됐었다.

이날 강 의원은 “가계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우리나라 가계 특성을 고려할 때 EBS에 대한 제한적 MMS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EBS 채널이 돌로 나뉘면 다양한 교육 방송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MMS를 도입하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정 전에 EBS에 시범서비스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재욱 jokwak@naver.com

KBS, ITU 전권회의서 UHD 시연

KBS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지상파 UHD 방송 시연에 나섰다.

전 세계 ICT 정책 대표단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의 기술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S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부산 벙스코에서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 기간 동안 벙스코 컨벤션홀 1층 로비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연한다고 밝혔다.

KBS는 <의계, 8일간의 축제> 등 그동안 KBS가 자체 제작해온 4K 60p UHD 콘텐츠를 KBS주조성실에서 부산 벙스코까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국가과학기술연구망

(KREONET)을 사용해 압축 및 비압축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ICT 정책을 총괄하는 세계 각국의 대표가 모이는 회의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시연은 수도권외의 지상파 UHD 송출신호와 동시간에 동일한 콘텐츠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ETRI의 LDM 기술, 현실성 없다

“기존 DMB 단말기 무용지물에 난시청 유발까지 문제 많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최근 시연한 ‘LDM 기반 차세대 지상파방송 기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ETRI가 하나의 송신기로 하나의 방송 채널에서 4K 초고화질(UHD) 방송과 이동형 HD 방송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새로운 LDM 기술(계층분할다중화, Layered Division Multiplexing)을 개발했다며 700MHz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했다고 보도했다. LDM 기술을 활용하면 DMB와 지상파 UHD 방송을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내보낼 수 있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마치 새로운 기술처럼 포장된 LDM 기술은 과거에도 존재했던 개념으로 ETRI와 캐나다 통신연구센터(CRC), 스페인 UPV/EHU 소속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ATSC 3.0에 제안한 기술이다. DMB와 지상파 UHD 방송을 하나의 주파수에 중첩해 송신하는 기술로 수신기는 먼저 모바일 신호를 수신하고, 그 뒤 모바일 신호를 제거한 다음에 UHD 방송 신호를 복원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LDM 기술 적용 시 현재 DMB 단말기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DMB 대역을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대역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의 DMB 단말기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난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LDM 기술이 적용되면 수신기 신호 처리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다. DMB와 같은 모바일 단말기 수신 신호 처리가 복잡해지고, 회로가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난시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LDM 기술은 아직 표준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방송 관계자는 “DMB 대역인 VHF 대역은 국내 디지털 라디오, 지상파 DMB, DTV 예비 대역에 대한 정책의 문제로 LDM 기술과는 무관하다. VHF 대역은 전파의 특성상 DTV와 맞지 않기 때문에 유럽도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VHF 대역의 TV 방송을 거의 폐지했고, 미국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의 지역 방송사가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 중”이라며 “ETRI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700MHz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번 ETRI의 ‘지상파 DTV 분산 중계기’ 왜곡 보도에 이어 이번 LDM 기술까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실행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연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차일피일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700MHz 주파수와 지상파 UHD 방송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하철 기관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 요구”

수도권 지하철서 DMB 못 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지상파 DMB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지상파 DMB를 보지 못하는 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상파 DMB 6개 방송사 협의체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이하 지특위)는 10월 29일 수도권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지상파 DMB 수신 장애가 발생해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지하철 기관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지특위는 “재난방송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하철이나 터널 등의 시설 관리주체가 지상파 DMB 수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지하철 기관들이 방송사의 중계 설비 인수를 지연시키면서 수도권 4개 역사와 터널 구간에서 지상파 DMB 방송 수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태가 지속

될 경우 서비스 장애 지역은 계속 늘어나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수도권 지하철의 지상파 DMB 서비스는 방송사의 시설 투자와 유지보수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부터 일부 개정돼 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대피장소로 활용되는 지하철이나 터널 등에 지상파 DMB 수신 시설이 의무화되며 각 시설의 관리주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에 지상파 DMB 방송사들은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사 소유의 기존 중계 설비 등을 무상으로 넘기겠다고 밝히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해당 수도권 지하철 기관들은 그동안 방송사로부터 받아왔던 시설 사용료를 그대로 요구하며 해당 시설의 인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수도권 지하철 및 터널 곳곳에서

는 지상파 DMB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재난재해 발생 시 전원 공급이 차단될 경우 실내 TV나 통신망 등은 동시 정전이 되는 반면 지상파 DMB는 방송망으로 안전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DMB를 재난경보매체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단말기 보급 상황, 휴대 편의성, 이동성 등에서 재난방송에 적합한 공공매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상파 DMB 관련법까지 개정된 것인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지하철 기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지상파 DMB 중계 설비가 있는 수도권 4개 지하철 기관 중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방송사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 다른 3개 지하철 기관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국 ICT, 제조업 성장 불구 서비스업은 성장 못해

‘미국·중국의 경제지표 및 환율’ 중요 외부 변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KISDI STAT Report-ICT 산업 생산지수>를 통해 본 한국 ICT 산업 추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정확 KISDI 정보사회분석실 ICT통계분석센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월별 ICT 산업 생산지수를 이용해 2000년대 한국 ICT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동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ICT 제조업의 특성상 ICT 제조업이 ICT 서비스업보다 외부 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T 제조업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및 환율이 중요한 외부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한국의 ICT 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서비스업으로 성장이 확산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ICT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고, 전 세계적인 불안정성 및 저성장에 노출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ICT 제조업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이러한 성장률 하향은 경제위기 이후에 뚜렷한데, 미국 및 중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ICT 제조업의 대외의존도를 고려할 때, 향후 글로벌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될 위험은 더 높다고 불만한 대목이다.

셋째, 국내 ICT 제조업 생산의 정체는 ICT 제조업의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과 신규 성장 동력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넷째, ICT 서비스업은 아직 2000년대 초반 이후 ICT 제조업을 대신해 ICT 산업을 이끌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ICT 제조업이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ICT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서비스업 측면에서 발굴돼야 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생산지수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08~2009년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ICT 제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서비스업과 같은 ICT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세를 보였으며, 매우 강한 계절 주기성이 발견됐다. 특히 ICT 제조업 생산의 성장세가 최근 수년 동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전반과 ICT 제조업을 비교한 결과, ICT 제조업은 제조업 전반보다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가 최근 들어 성장 추세가 제조업 성장률에 하향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짧은 기간에 ICT 산업, 특히 하드웨어 중심의 ICT 제조업이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경제위기 기간에 ICT 제조업이 급락과 급반등을 겪은 이후 이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반면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ICT 서비스업을 비교한 결과, ICT 서비스업은 2000년대 초반에만 매우 빠르게 성장했을 뿐 그 이후로 차별화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소비자 경기에 예민할 수 있는 서비스업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ICT 제조업이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플러스 성장을 꾸준히 이룬 것과 달리 ICT 서비스업은 수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겪어왔다.

보고서는 ICT 제조업이 미국과 중국과 같은 해외 주요 시장 동향에 강하게 동조하는 현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환율 역시 ICT 제조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말해준다. 반면 ICT 서비스업에 대한 해외 요인의 영향은 명확하지 않으며, 국내 거시경제지표와의 연동성도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곽재욱 jokwak@naver.com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법적 정당성 없다”

고민수 교수,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서 주장

법적 명령에 의해 공적업무(public service)를 수행하고 있는 지상파의 재정적 위기를 방지하면서까지 유료방송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비대칭 광고 규제와 매체균형발전론은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고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밝혔다.

이날 고 교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광고를 주 재원으로 하거나 사인(私人)이 주체가 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편성의무와 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공영방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입법자에게는 이러한 공영방송 주체들이 공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 검토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인 만큼 관련 법규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중간광고 현황’을 주제로 동대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송영주 소르본대학 박사의 공동발제도 이뤄졌다.

송 박사는 “유럽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광고 규제가 엄격한 프랑스에서도 해외 프로그램의 만연을 방지하고 전체 방송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수익 확대를 꾀하고 있다”면서 “중간광고를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국내 미디어 환경·이용행태 변화 ‘한눈에’

KISDI,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개최…16편 논문 발표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를 파악해 방송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이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은 지난 10월 2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논문 15편,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논문 3편 등 총 18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미디어 환경 및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KISDI가 2010년부터 시작해 온 통계조사다. 전국 17개 시도 5,000여 가구와 1만여 명이 넘는 가구원들을 패널로 구축해 미디어 기기, 방송통신 서비스 및 이용현황, 개인 삶의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지난해 첫 시작을 알린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는 이렇게 축적된 미디어패널조사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패널조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4면에 계속

민서진 seojin@kobeta.com

“UHD 방송으로 무료 보편적 복지 실현할 것”

전국 지상파방송, 대국민 약속 담은 공동선언문 발표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상파 UHD 방송으로 무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 회원사인 전국 지상파 방송사 대표와 주요 임원 70여 명은 10월 30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지상파 UHD 방송으로 시청자 복지를 실현하고, 중간광고를 통한 재원을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투입해 아시아 방송 시장의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는 TV 수신료 현실화를 통한 공영방송의 자원 안정화로 지역과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협회는 “다매체 다 플랫폼 정책으로 지상파방송 독과점 시대가 끝난 지 오

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규제, 편성규제, 외주규제, 높은 방송발전기금 등 방송 관련 다양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지상파를 만성 적자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방통융합 시대에 들어서는 통신 위주의 정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상파의 공적 책무 수행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이대로 가면 아시아 시장에서 힘들게 구축한 한국의 방송 콘텐츠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할 수도 있다”며 특히 내년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 문화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방송협회는 공동선언문 발표에 이어 방송경영인세미나를 개최해 지상파 주요 정책 쟁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언론·시민단체 반대 불구 ‘MBC 조직개편 단행’

교양제작국 해체…노사갈등 심화 우려

MBC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PD와 기자들을 사업 관련 부서 등으로 전보 조치해 사회 각계에 논란이 거세다.

MBC는 “뉴미디어와 종합편성채널 등장 등으로 매체환경이 엄혹한 가운데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해소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상암시대를 열며 핵심역량의 집중과 확대, 조직 혁신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매체전략국 신설 △특임사업국 신설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 신설 △드라마프로듀싱부 드라마마케팅부로 확대 △예능마케팅부·해외제작부 신설 △콘텐츠협력국을 콘텐츠제작국으로 개편 △신사업개발센터 신설 △법무저작권부 법무실로 확대 등이다. 우려했던 대로 ‘교양제작국’이 해체되고, MBC 대표 교양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원더풀 금요일〉 등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MBC 경영진은 이번 조직 개편 계획의 명분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강화’와 ‘수익성 중심의 조직 재편’ 등을 내세웠다. MBC는 지난 2012년 장기파업으로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100분 토론〉 등 간판 보도·시사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제작·방송되지 못해 광고판매액이 2011

년 650억 원에서 2013년 268.5억 원으로 2년 만에 60%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공영방송 포기’, ‘MBC의 침몰’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이번 조치가 시사·교양PD들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MBC는 2010년 김재철 전 사장 취임 직후부터 시사·교양 부문을 대폭 축소해 지난 4년 동안 시사·교양PD 신입사원 채용이 전무했으며, 2012년에는 ‘시사교양국’을 해체해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축소하고 대표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의 간판PD였던 최승호 PD를 해고한 바 있다.

한편 MBC는 지난 10월 31일 인사발령을 통해 직원 130여 명에 대한 전보 조치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회사에 비판적 의견을 피력했던 PD와 기자들이 집중 포격을 당했다. 2005년 〈PD수첩〉에서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을 다뤘던 한학수 교양제작국 PD는 사업부서인 산사육개발센터로, 〈PD수첩〉팀장이었고 다큐멘터리 〈안중근〉으로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던 김환균 PD는 사업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을 받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기자직 역시 김재철 사장 시절 MBC 보도국 내부 전산망

에 비판의 글을 올렸던 이용주 기자와 MBC 파업 당시 집단 사직 결의에 참여한 강영섭 기자가 경영지원국 인재개발부로 ‘교육발령’을 받는 등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양 없는 MBC’ 조직 개편의 후속 인사는 밀실 보복 인사”라면서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조직들은 사측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들과 PD들을 숙아 내고 배제하기 위한 도구”라고 맹비난했다. MBC 기자회견 역시 별도의 성명을 통해 “기자로서 누구보다 일 잘할 수 있는 인력을 갈기갈기 찢어 전출시키는 게 관련 ‘적재적소 인력 배치’이며 ‘벽을 허문 융복합 인사’라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이번 MBC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각종 매체에서 비판의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서는 MBC를 방치하는 일을 두고 ‘방통위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0월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조직개편은) 한마디로 공익성을 포기하고 효율성과 수익성만 추구하는 개편으로 방송광고 매출 감소와 같은 경영난 타개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영방송인 MBC의 위상과 책무를 포기한 개편”라고 지적하며 방통위 차원의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미디어 기업, ‘소비자 중심’ 혁신·협업으로 접근해야”

“오늘날 미디어 시장은 나의 경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화된 미디어 플랫폼 안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지속가능한 생존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디어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로버트 피카드 교수(Robert G. Picard, 영국 옥스퍼드대)가 지난 10월 28일 서울 소공동 조선회관에서 열린 ‘2014 미디어리더스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나의 TV를 온가족이 시청하던 과거에는 콘텐츠 제공자가 정해진 소수의 플랫폼을 선택했지만 다양한 멀티채널 시대인 오늘날은 케이블 채널, 위성 채널 등 플랫폼의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갔다.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송되는 지금의 미디어 시장에서는 개인적이고 액티브한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기업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다양하게 교차되는 각각의 플랫폼들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피카드 교수는 말한

다. 개별화된 소비자가 미디어를 필요로 하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를 비롯해 개인의 동기, 니즈, 기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그는 “지금의 미디어 시장은 6~9개월 단위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 기업이 대처하기 쉽지 않다”면서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 맥락과 관련성을 살펴봐야 하며, 그 같은 지속적 ‘혁신’과 ‘학습’의 반복 없이 기업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업의 혁신적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와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피카드 교수의 설명이다. 미디어 환경이 모바일과 무선으로 이동하면서 훌루(hulu), 넷플릭스(Netflix) 등 외부 경쟁사들이 TV 기반 시장에서 고객의 수입을 함께 나눠 갖는 상황에서 미디어 기업은 더 이상 외부 경쟁사들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피카드 교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케이블 사업자, 위성통신 사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현 상황에서 미디어 기업들은 고객사 혹은 경

쟁사들과 어떻게 협업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들과 함께 서비스 공동생산, 고객 개인화 기대치 만족, 세일즈와 고객 간 소통 등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미디어 분야는 발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광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TV 기반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새로운 광고 시장을 형성하고 이것이 기업에 매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광고시장에서는 과거 같은 기업 중심의 활동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얘기가.

따라서 그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B2C(Business-to-Customer) 활동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객에게 접근해 제품을 개발하고 만족을 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버트 피카드 교수는 세계적인 미디어 연구 센터 ‘로이트 인스티튜트’의 리서치 디렉터로 미디어 경제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여러 국가에 미디어 관련 정책 자문을 펼치고 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중국 샤오미, 세계 스마트폰 시장서 세계 3위 올라

글로벌 시장 진출 노력 … “국내 업체 경쟁력 키워야”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산 스마트폰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와 화웨이를 제치고 3위에 올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30일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샤오미는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800만 대를 판매해 5.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7,920만 대, 24.7%)와 애플(3,930만 대, 12.3%)에 이어 3위다. LG전자(1,680만 대, 5.2%)와 화웨이(1,610만 대, 5.1%)는 그 뒤를 이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샤오미의 성장이 삼성전자의 성장 증가세 둔화와 맞물려

더 주목받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판매량과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당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닐 모스튼 SA 이사는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 중저가 시장에서는 샤오미나 화웨이, 레노버 등과 힘든 경쟁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샤오미가 이번 기회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샤오미는 국내외 투자는 행으로부터 10억 달러(1조 538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샤오미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시행으로 국내 스마트폰 구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샤오미와 같은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샤오미가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면 국내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최근 샤오미와 화웨이 같은 외국산 스마트폰의 공기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액세서리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 스마트폰 판매 흐름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KT스카이라이프, 3분기 실적 바닥

“더 큰 문제는 가입자 증가 둔화” … DCS 재개에 관심 집중

KT스카이라이프가 기존 표준해상도(SD) 가입자의 고화질(HD) 전환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로 3분기(7~9월) 실적 악화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3분기 실적 악화는 일회성 비용 발생일 뿐 KT스카이라이프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가입자 증가 둔화 추세라고 꼬집고 있어 ‘접시 없는 위성방송(Dish Convergence Solution, 이하 DCS)’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10월 30일 3분기 실적발표 공시를 통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73% 감소한 76억 8,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분기와 비교해서도 55.6% 감소한 규모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05억 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7%, 전년기대비 3.7% 증가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3분기 가입자는 426만 명으로 1만 4,000명 증가했고, 가입자 증가에 따라 홈쇼핑을 비롯한 플랫폼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면서 “다만 All-HD 구축을 위해 SD 가입자를 HD로 전환했고, 광고 선전비도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비용이 크게 늘어 결과적으로 실적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3분기 영업비용은 지난해보다 26.7% 늘어난 1,52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가입자 증가 추세가 점차 둔화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T스카이라이프의 3분기 신규 가입자는 2만 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거의 최저 수준이다. 이에 반해 해지 가입자는 매분기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르면 11월 중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사업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에게 있어 DCS 사업 재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DCS는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위성에서 전송한 방송 신호를 각 지역의 KT전화국이 수신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한 뒤 이를 KT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까지 송출하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위성방송과 IPTV(인터넷TV)가 결합된 방식이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으로만 서비스를 해야 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유선망을 사용하는 것은 방송 의무 위반이라며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 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하면서 DCS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케이블 업계에서는 “케이블과 IPTV에 가입자 수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위성방송은 가입자 모집에 제한이 없어 공정 환경 조성 이후 DCS 사업 재개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또한 DCS 서비스는 단순 기술 결합 방식으로 ICT 특별법상 임시 허가 기준인 정보통신 융합 기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염두에 둔 듯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0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DCS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케이블 등) 업계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라며 케이블 업계와의 협의 후에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KT와 망 투자비용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대로 DCS 사업 재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사업 재개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조대현 KBS 사장, ABU 15대 회장에 선출



열린 제51차 ABU 총회에서 회원사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됐다.

신임 조 회장은 ABU 회장 수락연설을 통해 “회원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 방송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가 아태방송연맹의 회공사(社)가

된 것은 지난 2011년 뉴델리 총회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KBS는 “조 사장이 ABU 회장에 선출됨에 따라 공영방송 KBS도 회장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디어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회원사 간의 교류 증진을 돕는 구심점 역할을 계속 맡게 된다”며 “한류와 KBS 콘텐츠의 보급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BU는 64개국 260여개 회원사가 소속된 방송기구로 세계 3대 방송기구 중 하나며 지난 1964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방송발전과 회원사 간 협력을 위해 설립됐다.

강민정 mjkang@kobeta.com

3면에 이어▶ 실질적인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를 추적 조사한 결과물로 정보통신 관련 이론의 개발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올해 대회는 ‘미디어 이용행태와 연관 산업의 진화’와 ‘미디어와 삶의 만족도’ △시공간과 미디어 이용 △스마트시대의 미디어 소비 △정보와 지식공유 등 5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방송 산업과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가정용 TV로 유료 방송 서비스를 이용한 TV 방송다시보기(VOD) 및 영화 시청하기,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TV 방송 및 영화 시청하기 등과 같은 미디어 이용행태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미디어

디지털 융합의 진전에 따른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유료 방송 콘텐츠 묶음에 미치는 효과를 향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 스마트화의 진전 등 미디어 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시대에 맞물려 미디어의 실질적이 이용행태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정보통신 관련 이론의 개발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그동안 축적된 미디어패널조사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패널조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ITU 전권회의

‘ICT 올림픽’ ITU 전권회의의 대장정, 11월 7일 마무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그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ITU 전권회의는 국제연합(UN)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인 ITU의 최고 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국제 주파수 분배, 정보통신 국제표준, 사이버 보안, ICT를 통한 인류 발전 등 글로벌 ICT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된다. 1865년 첫 회의가 개최됐으며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일본(1994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14 ITU 전권회의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1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하마돈 뚜레 ITU 사무총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등 국내외 인사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전 세계 170여 개국 3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3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1차 본회의에선 민원기 의장 예정자를 전권회의 의장으로 공식 추대하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정책연설을 시작으로 각국 수석대표의 정책연설이 10월 23일까지 이어졌다.

또 이번 전권회의에서는 ITU 수장인 차기 사무총장을 포함해 65개 고위직 및 이사국도 선출했다.

먼저 ITU 차기 사무총장으로 중국의 자오허우린(趙厚麟·Zhao Houlin, 64) 현 사무차장이 당선됐다. 자오허우린(이하 자오)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4년간이고, ITU 운영 및 의사결정 등의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자오 당선자가 ITU 초급 엔지니어 및 자문관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86년부터다. 이후 다양한 직책을 거친 자오 당선자는 ITU 활동을 시작한 지 20년 만인 지난 2006년 11월 사무차장에 당선됐고 8년간 차장직을 맡아올 정도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ITU 역대 사무총장 중 중국 후보가 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자오 사무차장의 당선으로 중국이 세계 ICT 산업의 실

세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의 정보통신 업체들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정보통신 선진국들과의 기술력 차이도 점점 좁혀지고 있어 중국이 미국과 함께 ICT 분야에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도 ITU 고위직 중 하나인 표준화 총국장에 당선됐다. 이 연구위원은 10월 24일 진행된 표준화총국장 선거에서 총 169표 가운데 과반 이상인 87표를 얻어 한국인

으로서 최초로 ITU 고위직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ITU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로 선출되는 ITU 5대 고위직에 두 명의 아시아인이 진출하는 기록이 수립됐다.

이 표준화총국장 당선자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 4년간 ITU 표준화총국장직을 수행하고, 본인이 원하면 1차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어 최장 8년간 표준화 총국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건국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KT 연구개발본부에서 일하며 ITU에 첫 발을 들여냈다. 이후 ITU 표준화총국 미래네트워크(SG13) 분야 에디터, 통신망 구조(SG13 WP1) 의장, 차세대 네트워크 포커스그룹 의장, SG13 부의장을 거쳐 2009년부터는 SG13 의장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표준 정책 결정에 크게 기여해왔다.

ITU 표준화총국장은 ICT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ITU 표준화 부문(ITU-T)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차세대 정보통신, 인터넷 정책 등 ICT 글로벌 표준에 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ICT 기술과 산업이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글

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세 활동을 하며 한국 ICT 인지도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는 한국만의 ICT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 속의 한국 ICT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4년간 표준화총국 업무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ITU 이사국 선거에서 7회 연속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은 10월 27일 ITU 전권회의 본회의장에서 열린 ITU 이사국 선거에서 유효표 167표 중 총 140표를 획득해 압도적 지지로 13개 이사국에 당선됐다.

ITU 이사국은 아시아·태평양 13개국을 비롯해 미주, 아프리카, 유럽, 동구(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 등 총 48개국으로 구성된다. ITU 이사국 임기는 4년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처음 ITU 이사국에 진출한 이후 연속 6회 선출돼 지난 20년 동안 ITU 운영과 전략계획 수립,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해왔다.

특히 ITU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실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ITU 이사국 선출은 우리나라가 세계 ICT 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이상학 부단장은 “150년 전통의 국제연합(UN) 산하 ICT 분야 정부 간 국제기구인 ITU에 이사국 7회 연속 진출은 우리나라가 ITU ICT 개발지수(IDI) 3년 연속 1위, UN 전자정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ICT 강국임을 ITU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ICT 경쟁력 확보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는 국내 벤처기업이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구현한

지능형 물품보관함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현재 각국 대표단들이 이용 중인 1,500개의 스마트박스는 보관함 문에 부착된 디지털 잠금 장치에 자체 개발한 첨단 저전력 무선 통신 모듈을 탑재해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관함을 배정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실생활에서 IoT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많은 대표단들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011년 초부터 제품을 개발해온 나예룡 스마트박스 대표는 “스마트박스는 기존의 물품 보관 및 전달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존의 수많은 수동식 보관함들이 손쉽게 첨단 지능형 보관함으로 전환돼 마트, 지하철, 놀이시설 등의 물품 보관함은 물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기숙사 등의 물품 전달함(무인 택배함) 등에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권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는 전권회의 외에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 IT쇼’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렸고, 미래 이동통신(5G) 현황과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5G Global Summit’이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빅데이터 월드 컨벤션’이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ICT 프리미엄 포럼’이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렸으며, ‘클라우드 엑스포’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헬스 IT융합 전시회’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제 ITU 전권회의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ITU 전권회의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CT 인프라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행사기간 중 우리나라를 찾은 전 세계 ICT 대표단에게 IoT, IoE, 홀로그램 등 국내 ICT 기술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장이 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ITU 전권회의 주최국 특별행사

글로벌 ICT 리더들이 모였다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주최국 특별행사인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이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리더들이 3C(Creative Government, Creative Enterprise, Creative User)를 주제로 ICT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강연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21세기는 맥락의 시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무랏 손메즈 세계경제포럼(WEF) 경영이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랏 손메즈 경영이사는 “20세기가 콘텐츠에 중심을 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콘텐츠와 같은 특정한 지식뿐 아니라 특정 상황에 맞춰 지식을 결합하는 이른바 문맥이나 맥락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특정 상황에 맞춰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무랏 손메즈 경영이사는 인간, 공공정책, 비즈니스 모델, 문화, (과학) 기술 등 5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춰 ‘창조경제의 기회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첫 번째 ‘창조적 정부’ 세션 강연자로선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나섰다. 윤 차관은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ICT 토양부터 제대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많은 사람들이 창조경제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창조경제는 정책을 넘어선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립한 뒤 “농업과 마찬가지로 창조경제도 적절한 토양과 훌륭한 씨앗인 ICT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이 천연자원 100% 식량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분단 상황에서 국방비도 많이 소요하고 있음을 설명한 뒤 이 같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창조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50년대 서울과 오늘날 서울의 비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혁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ICT 분야가 GDP의 9%를 차지하고 있지만 GDP 성장률에 대한 ICT 기여도는 거의 16%에 달하는 만큼 ICT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운전하는 직원의 ‘기가 박스’라는 아이디어로 바닥에서 다시 재기에 성공한 인텔의 예를 설명하며 “(ICT 인프라 구축에 따른) 혁신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 뒤 상상력,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미래부가 앞장서고 있음을 언급했다.

미래부가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한상상실이 바로 그 중 하나다. 윤 차관은 “현재 한국 인구의 1%만 연구개발(R&D)에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한상상실 등을 통해 R&D를 넘어 상상개발(I&D)에 종사하는 사람 수를 늘려갈 것”이라며 미래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틀을 이용해 창조경제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IoT와 IoE가 창조경제”

두 번째 ‘창조적 기업’ 세션의 연사로선 로버트 페

퍼 시스코시스템즈 부사장이 나섰다. 그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과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이하 IoE)이 바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라고 해석했다.

이날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단에 오른 로버트 페퍼 부사장은 “차세대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IoT와 IoE”라며 “데이터를 분석해 통찰력으로 바꾸는 IoT와 IoE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고,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발전 단계를 4단계로 나눠 초기 인터넷이 단순히 ‘연결’만 해준 1단계였다면 2단계는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 경제’, 3단계는 SNS를 통한 ‘몰입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분석한 뒤 앞으로 4단계의 인터넷은 IoT와 IoE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버트 페퍼 부사장은 “지금 인터넷에 연결된 전 세계 사물은 1%에 머물고 있어 남은 99%가 잠재적 시장”이라고 말한 뒤 “IoT의 가치는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각각 14조4천억 달러, 4조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시스템 코본이나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IoT를 도입해 비용을 줄이고 매출은 높인 ‘할리데이비슨’, ‘네트워크레일’ 등의 기업 사례와 스마트시티를 도입해 일자리와 세수를 늘리고 교통체증은 줄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예를 들어 기업과 정부가 IoT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IoT와 IoE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선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들도 남아 있다. 로버트 페퍼 부사장은 마지막으로 “IoT와 IoE 시장의 성

장을 위해선 기술적으로 신뢰성 등이 회복돼야 하고, (각 국가마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이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VS ‘다음카카오’ … 상반된 분위기

마지막 ‘유비쿼터스 세상의 중심’ 세션에는 김상현 네이버 대표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나와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플랫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대표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보를 생산하던 권력과 소비하던 대중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며 앞으로 대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다양하게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네이버가 2002년부터 시작한 ‘지식 iN’과 블로그 서비스 역시 대중의 관심 이용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네이버는 ‘웹소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크리에이터스 마켓’ 등 대중이 정보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 이 대표는 앞서 다음카카오 공식 출범에서 밝힌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구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기존에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발전된 형태의 연결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상현 네이버 대표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강연은 표정과 분위기가 대조돼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글로벌 메신저 라인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네이버와 최근 불거진 감청 검열 논란에 서있는 카카오톡의 상반된 입장이 이날 강연장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YES! AES! 137th AES Convention 참관기



김지완 SBS 보도기술팀



AES! 방송국 직원이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단어 일 것이다. YES! 그렇다. 방송국 디지털 오디오 표준 AES/EBU(Audio Engineering Society / European Broadcasting Union [추측컨대 이 표준 이름을 위해서 두 협회가 엄청나게 싸웠을 것이다])로 익히 알려져 있다. AES Convention이 미국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출장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What is AES Convention?

137회를 맞은 이번 AES Convention은 10월 9일부터 10월 12일 까지 LA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AES Convention은 Audio Engineering Society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개최하는 전시회 및 콘퍼런스로 2014년에는 독일 베를린(4/26~4/29)에 이어 미국 LA에서 두 번째로 개최됐다. 113회 이후 12년 만에 LA로 돌아왔다고 한다(138회 AES Convention은 폴란드 Warsaw 개최 예정).

1만 5,403명의 등록 참가자와 307개의 회사가 이번 컨벤션을 위해 참가했다. 올해 KOBIA 입장 인원이 4만 4,002명, 893개 참가 회사수와 단순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지만 세션의 경우 200여 개로 KOBIA 세션 60여 개의 3배나 많은 수와 다양한 장르를 자랑했다. 세션은 주제별로 23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오디오에 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한 Audio Total Solution이다. 오디오 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디오인들을 위한 오디오 교육 프로그램을 보며 AES convention이 왜 이렇게 많은 참석자들이 열광하는 행사인지 알 수 있었다.

듣고 싶은 수많은 세션들이 있지만 모든 강의를 들을 수는 없었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18개의 세션을 정하고 4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콘퍼런스에 매진했다.

트랙	내용
1 Broadcast and Streaming	방송 오디오 표준 방송 오디오 제작 차세대 방송 오디오 이슈
2 Engineering Briefs	하나의 주제에 관한 엔지니어의 발표 및 내용전달
3 Game Audio Sessions	게임 오디오 제작 노하우와 MIDI, DAW 등
4 Historical Events	오디오의 모든 것에 대한 역사
5 Live Sound Expo	장비 시연을 통한 라이브 사운드 노하우 공유
6 Live Sound Seminar	라이브 사운드 이슈 사항 세미나
7 Networked Audio Session	오디오 네트워크 전송 표준
8 Paper Sessions	오디오관련 논문 발표 및 토론
9 Product Design Sessions	오디오 시스템 디자인
10 Project Studio Expo	참가자들이 음악을 함께 들어보고 토론 및 느낌 공유
11 Recording & Production Sessions	실전 예제를 통한 레코딩 노하우

12 Sound for Picture Sessions	영화 사운드
13 Special Events	오프닝 세레모니, 오디오 엔지니어 행사 초청
14 Student & Career Sessions	오디오 전공 학생 및 오디오 관련 구직자를 위한 세션
15 Tutorials	오디오 기초부터 심층적인 내용까지 오디오 전문가 및 교수 강의
16 Workshop	오디오 발전을 위한 기술, 법률, 행정 등 각 주제별 회의
17 Technical Tour	LA 인근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 콘서트 홀 등을 둘러보고 현장을 익히는 견학 프로그램
18 Technical Council and Technical Committee Meetings	AES 기술 위원회 연례회의
19 Standards Committee Meetings	AES에서 진행하는 표준화 작업 회의
20 DTV Audio Group/AES Forum	TV표준화에 관한 포럼
21 High Resolution Audio	AES와 DECDigital Entertainment Group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품질 음향 산업 활성화 모임

All About Audio Issues

이번 콘퍼런스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UHD에 대응하는 MPEG의 차세대 표준인 MPEG-H 3D Audio와 차세대 IP 오디오 전송 표준인 AES67이었다. 이들 주제에 대한 다수의 강연이 있었고 적용 사례 및 표준에 대한 이슈 사항들을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어떠한 표준이든 개방, 맞춤, 개인 지향적인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와 N-스크린, 세컨드 스크린 등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 가지 미디어 포맷에서 오디오 엔지니어가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Technical Tour

LA 인근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 콘서트 홀 등을 둘러보고 현장을 익히는 견학으로 20th Century Fox, Dolby Theater, Walt Disney Concert Hall, Capitol Studios, Henson Recording Studio, The Dub Stage 총 6개의 Technical Tour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LA는 미국의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의 도시로 콘텐츠 제작 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많은 스튜디오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등록 첫날부터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오디오 마니아들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결국 신청은 첫날에 마감되어 버렸지만 다행히 일찍 줄을 선 덕분에 원하는 투어는 모두 참여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다.

평소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팝 음악을 감상하며, 미국의 콘텐츠 제작 시설물들은 최신 건물에 최신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란 환상에 빠져 있었다. 은연중에 과거의 것은 뒤쳐진 것이라 생각하는 '최신병'이 나한테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건축물

부터 실내 조정실까지 모든 것이 짧게는 20여년 길게는 100년 동안 오래 길들여진 커다란 악기 그 자체인 것 같았다. 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아담한 목조 건물에 빈티지 오디오 장비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공간에서 내뿜는 가공할만한 소리는 나쁜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가자 모두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스튜디오 담당자의 친절한 설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명반은 오디오 엔지니어의 손끝에서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Historical Events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왕찰래 以往察來) 이 트랙은 오디오 역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디오의 진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오디오의 미래까지도 예견할 수 있었다. 튼튼한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AES의 모습은 오디오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었다.

Listen and feel!

음악을 함께 들으며 느낌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세션들도 인기가 많았다. 'Listen Up, and Learn!-Track2' 세션은 Stephen Webber 교수와 Alex Case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록밴드 The Wallflowers의 히트곡인 'One Headlight'를 헤드폰으로 감상한 후, 제작자로서 엔지니어로서 또한 팬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느낌을 공유했다.

'Inside the Mix by Dave Reitzas' 세션에서는 할리우드에서 저명한 오디오 믹싱 엔지니어인 Dave Reitzas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그래미상을 다수 수상한 (Unforgettable : With Love-Natalie Cole, Ray of Light-Madonna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 믹싱 엔지니어다. 그의 명반 제작 경험담을 듣고 믹싱 기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가 이야기하는 유명인들과의 협업, 엔지니어로서의 시각, 자세 등은 오디오 장인 정신을 참가자들에게 일깨웠다.

Student & Career Sessions

AES Convention의 특징 중 하나는 오디오 전문가뿐만 아니라 오디오를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램들과 친절한 서비스 등이 많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Student & Career Sessions 트랙은 대학 교수부터 현장 전문가까지

학생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 오디오 장비와 함께 진행되는 체험형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오디오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의 질문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자세는 AES 발전의 또 다른 밑거름이 아닌가 싶다.

특히 'Career Paths of the Audio Professional' 세션에서는 7명의 패널이 오디오 초보에서 전문가가 되기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오디오 전문가가 되려는 많은 도전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 없이 전달하는 모습은 선배로서의 자세를 일깨워 주었다. 또한 구직자와 회사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오디오 관련 구인, 구직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Back to my home

AES Convention은 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오디오 전공 학생들이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오디오 네트워크 구축의 전진기지이자 오디오 산업 발전 및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오디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AES Convention 축제의 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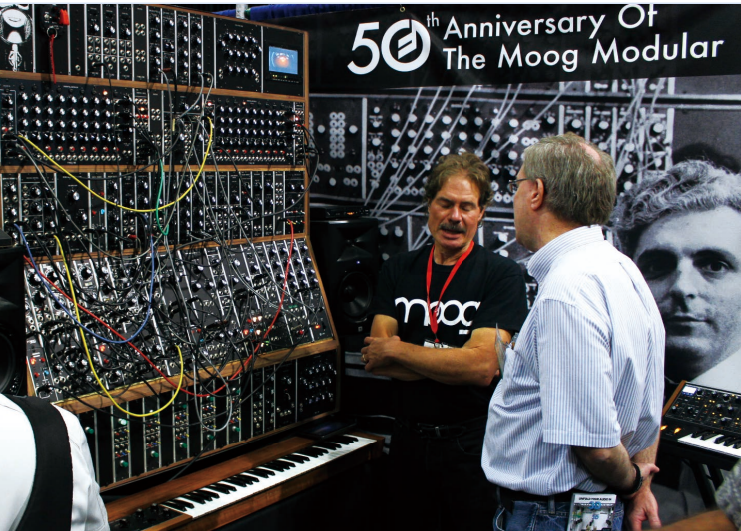
우선 방송 오디오 이외에 PA 라이브, 포스트 프로덕션, 게임 오디오 등 여러 오디오 분야의 강의와 간접 체험을 통해 오디오 동향을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었고, 다양한 핵심 주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폭 넓은 이해는 N-스크린 시대에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 방송 오디오 엔지니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AES Convention의 교육 트랙과 세션 구성을 통해서 오디오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방안에 대한 레퍼런스를 정리한 점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본다. 추후 KOBIA 콘퍼런스 오디오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에 차원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

출장을 시작할 때의 기분 좋은 설렘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나를 채우는 만족감으로 변해 있었다. 동시에 나의 배움을 온전히 동료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돌아왔다.

Special thanks to...

AES Convention 참가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방송기술교육원 강민정 과장과 민서진 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소중한 경험을 공유한 MBC 정인 차장에게도 무한 감사를 드린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 정녕 민영화를 원하는가?

칼럼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2008년 7월, 필자가 소속된 공공미디어 연구소가 기획하고 필자를 비롯한 여러 필진들이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으로 <mbc, MB氏를 부탁해>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다. 이 책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시기에 기획됐다. MB 정권의 MBC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MBC라는 공영방송사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던 필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MBC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책이었다. 당시 MBC는 대중들의 스타였고, 대중들은 MBC를 지키고 싶어 했다. 이후 약 6년이 지났다. 그리고 MBC는 정말 많이도 변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애정과 지지를 보였던 예전 MBC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실망이 컸다. 필자 역시 지금도 책장 한 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책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그 역할을 수행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기대, 간절함이 남아 있었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최근 MBC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광우병 쇠고기, 줄기세포 문제를 고발했던 <PD수첩>, <북극의 눈물>을 포함한 눈물 시리즈 등 다수의 명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교양제작국을 해체했다. 게다가 또 다시 시사교양 PD들과 비판적 기자들을 제작과 관련 없는 업무로 이직시키는 비상식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결국 시청률, 광고 확보 경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과거 MBC는 정통(?) 공영방송 채널인

KBS1과 민영방송인 SBS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그럼으로써 MBC는 KBS가 공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하였고, SBS는 민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견제하는 스파링 파트너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MBC에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번 조직개편 안에서 또 나타나는 것처럼, 공영방송으로서 가져

지상파방송은 '공적 자산'인 주파수를 기본으로 한다. 등록이나 신고가 아닌 3년마다 주파수 사용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전파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주파수의 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것이 지상파방송의 주인이 시청자인 이유이며, '공익'을 외면할 수 없는 근거다.

야 할 최소한의 '공익'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조심스레 MBC 스스로가 민영화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1987년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이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다. TF1이 그것이다. TF1

의 민영화는 결과적으로 프랑스 방송 환경을 시장 논리에 기초해 움직이게 만들었다. 민영화 이후 방송 채널들 간의 경쟁은 격렬한 양상을 띠었으며, 많은 후유증이 남게 됐다. 실제 TF1의 민영화 이후 프랑스의 방송 간 경쟁은 매우 과열됐다. 소유주였던 브이그(Bouygues) 그룹 측 프랑시스 부이그(Francis Bouygues)는 "우리는 민영방송이다. 즉, 우리는 상업방송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방송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이거나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다"는 주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즉, 값싼 할리우드 프로그램 수입에 더 관심을 갖고 보도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연성화되는 경향을 예고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그 결과 민영방송 한 채널(라 썬크:La Cinq)이 파산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 방송의 편성에 있어서 픽션 및 오락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팽창했고 프로그램의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제작비의 급격한 상승과 이에 따른 방송사의 재정 압박은 다시금 광고 수입 확장을 위한 방송사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경쟁은 방송사의 편성 관행과 제도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주 시청 시간대는 주로 외국산 픽션물로만 채워졌으며, 방송법이 자국산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를 법 조항으로 도입하는 규제적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각종 시사 토론 및 교양 프로그램은 심야 시간대로 밀려났다. 이 시기 프랑스의 민영방송에 의해 촉발된 경쟁은 결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가 국내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민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MBC가 공익성을 포기한 채 수익성과 시장논리에만 집중한다면,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여파는 MBC만의 문제가 아닌 지상파 방송 전체, 나아가 국내 방송환경의 커다란 변화, 그것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민영 주식회사' MBC라고 하더라도 그 주인은 시청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은 '공적 자산'인 주파수를 기본으로 한다. 등록이나 신고가 아닌 3년마다 주파수 사용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전파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주파수의 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것이 지상파방송의 주인이 시청자인 이유이며, '공익'을 외면할 수 없는 근거다.

사실

통합방송법, KT와 종편 특혜법에 머물 것인가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합친 일명 '통합방송법'의 초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통합방송법의 초안 그 어디에서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애초의 목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여전히 사업자들의 민원 창구 역할만 하고 있었다. 심지어 민감한 쟁점들은 모두 국회로 넘겨버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지난 10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유료 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합방송법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은 미래 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해온 공동연구단의 최종 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초안에 담긴 규제체계 정비의 기본 원칙은 △이용자(시청자) 권익 증진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수립 △유료 방송 사업과 IPTV 사업 간 규제 형평성 실현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 4가지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통합방송법의 초안에서는 4가지 기본 원칙이 모두 배제돼 있었다.

무엇보다 방송이라는 영역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송법 초안에는 유료 방송에 한정된 법안들만 포함돼 있어 초안 그대로 진행된다면 시청자의 권익을 오히려 침해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송 전문가들 역시 유료 방송과 공영 방송이 하나의 방송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유료 방송 영역만 다른 통합방송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통합방송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법안 자체가 기본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통합방송법의 핵심으로 불리던 유료 방송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가 빠져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현

재 KT는 IPTV(KT olleh 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이중 플랫폼 및 네트워크 사업자다. 문제는 KT가 소유하고 있는 위성방송이 가입자 상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성방송 가입자를 시장점유율 규제에 포함시키는 여부가 통합방송법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KT가 유료 방송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합산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이종원 KISDI 그룹장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자 합산 규제는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별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합산 규제 법안'이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그 책임을 또다시 국회로 떠넘긴 것이다. KT 특혜법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다.

종합편성채널 특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 공개된 통합방송법 초안에는 직접사용채널에 대해 IPTV는 현행대로 금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은 그 기능을 축소하는 다시 말해 보도 기능을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만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편에 대한 의무전송채널 사업자 지위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종편 편들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합방송법 초안을 가지고 1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한 뒤 내년 부터 본격적인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초안 그대로 진행된다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시청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방송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이 실현되는지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야 된다. 방송 철폐부터 제대로 세워 통합방송법의 첫 단추 끼우기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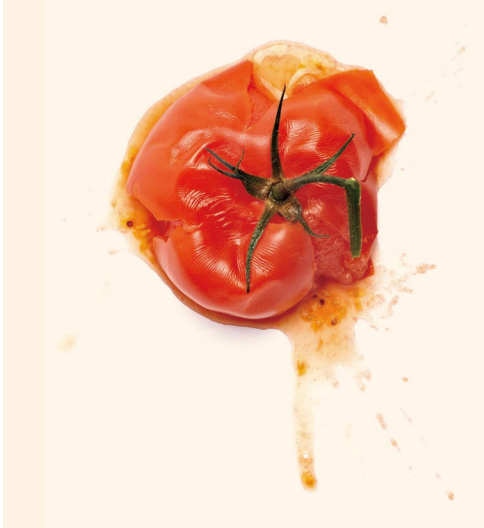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이후삼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편집주간 이상의	전화 02-3219-5637
편집위원 백낙운, 이승호, 안창준, 최권용, 나경록	팩스 02-2647-6813
취재기자 백선하, 객재옥,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트위터 @KOBETA_COM
기획실 강동균	홈페이지 www.kobeta.com
인쇄인 성전&화성프린원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 kobeta@naver.com

[성명서]

'700MHz' 밀어붙이기, 표리부동한 미래부를 성토한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통신 편향 주파수 알박기'로 집중 추궁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며 국회는 물론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700MHz 주파수의 통신용 배분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질타하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종적인 주파수 정책에 대해 국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 진실을 호도하는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미래부가 작성한 문서는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국가들이 해당 주파수 여유 대역을 대부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기존 대역까지도 이동통신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통합 공공망(재난망)'과 '이동통신'에 주파수를 우선 분배하고, 잔여대역은 국제 주파수 분배 동향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안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아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프랑스가 압축기술을 이용해 1개 채널(8MHz폭)로 UHD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우리는 아직 다채널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법적 방송 채널 정비 및 수상이 교체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먼 이야기다. 또한 일본이 통신 위성으로 부족한 주파수 문제를 해결해 UHD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방송사가 위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뿐 아니라 문서에는 우리나라가 700MHz 대역을 UHD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본 상향주파수(718~748MHz)·하향주파수(773~803MHz)와의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의 주장과 달리 양국은 이미 수년 전 논의를 통해 해안가 주파수 혼신 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 현재 제주 및 남부 지역 일부 해안가 대출력 송신소는 제한 조정을 하면 일본에 혼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700MHz 주파수 사용에 문제될 것이 없다.

계속적으로 통신 편향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거짓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추진을 요구하는 여야는 물론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가진 전 국민을 싸잡아 기만하는 행위다. 미래부는 앞에서는 허울 좋은 '협의'를 말하고 뒤에서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표리부동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10월 26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OBETA CONFERENCE KOC 2014

기술 그리고 희망



2014. 11. 19 (수)
KBS 아트홀 (구 라디오공개홀)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OLOGISTS ASSOCIATION

주 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OLOGISTS ASSOCIATION

 KETC
한국방송기술교육원